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주요정책 부문)

2022.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I.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주요 내용
정책설계	1. 성과지표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
	2. 과제수단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단의 적정성 ○ 과제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집행	1. 추진계획 준수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2. 상황변화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상황변화 모니터링 충실성 ○ 갈등발생 예방/해소 등 여건·상황변화 대응 노력의 적절성
	3. 협업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관/부서/민간과의 협업 노력
정책성과 및 효과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달성 정도
	2.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정책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
	3. 정책환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평가 및 중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 성과

II. 평가결과

(1) 총 평

□ '21년도 1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이상 과제는 'Ⅱ-2-②.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Ⅰ-1-①.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 'Ⅰ-1-④.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Ⅰ-2-③.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개선', 'Ⅱ-2-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I-1-③.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공직자들의 지위·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21.5월)하였고,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범정부 반부패 정책 조정,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 정책 수립·발전 등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CPI)가 5년 연속 상승해 2021년에는 62점으로 세계 32위를 기록하는 성과가 나타남
 -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21.4월)을 통해 보호대상 '공익신고'의 범위를 471개 법률로 확대하였고, 신고자 책임감면 강화 및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등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개정(21.8월)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청탁금지법 개정(21.11월)으로 부정 청탁 대상직무 유형을 확대하는 등 청렴한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음
- 이와 함께,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음
 -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91회 운영하여 1,482건을 상담·해결하였고, 사회적 과급효과가 큰 집단민원 135건을 해결하여 72,040여 명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다시 정책으로 환류하는 '국민생각함'을 활성화하였고,(국민생각함 참여자 : '20년 35만명 → '21년 44만명)
 - 탄소중립, 포스트코로나, 사회안전망 등 사회 현안, 주요 정책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총 26건)을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하였음

(2) 주요성과

- 'Ⅱ-2-②.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Ⅰ-1-①.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 'Ⅰ-1-④.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 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Ⅱ-2-②.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 등 추진
 - *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아이디어를 소관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숙성시켜 정부 정책으로 완성(32건), '20년 대비 7건 ↑
 - * 행정기관이 입안하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15건), '20년 대비 10건 ↑
 - * 전년 대비, 국민신문고 민원 38.6%, 국민생각함 참여 25.7% 증가
- (Ⅰ-1-①.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 부패 현안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대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확보하였고, 청렴 정책 평가·환류 체계 운영으로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지원
 - * '21년초 발생한 'NH직원 부동산 투기' 사안의 적시 대응을 위한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3.29)
 - *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4월~)
 - * '21년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방향을 반영한 청렴수준 진단·평가와 환류 및 청렴도-시책평가 통합으로 종합평가 체계 구축
- (Ⅰ-1-④.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 긍정적 평가로 국가청렴도가 상승('20년 61점 33위 → '21년 62점, 32위)하였고,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 *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노력·성과를 대상별(CPI 평가기관, 국내거주 외국기업인, 국내외 애널리스트 등) 맞춤형 홍보·협의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청렴계약제 등 7건의 반부패정책 의결·제안
 - * 윤리 준법경영 교육, 민간 공모사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3) 개선·보완 사항

- 'I-2-③.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개선', 'II-2-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I-1-③.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등 3개 과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I-2-③.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개선)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 관행, 부적정 행정 관행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 정책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종합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향후 과제수단의 설정-집행-성과 간 유기적 연계를 제고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필요
- (II-2-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 및 국민불편의 선제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으나, 과제의 목표에 부합하는 차별적 상황변화 대응 실적이 부족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경우 '수용·해결율'이 낮음. 향후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과제의 초점에 부합하는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극·소극행정 처리 성과를 개선할 필요
- (I-1-③.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코로나19 2년차인 어려운 교육 여건에도 공직자 42만명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1,700여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교육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부족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가 미흡. 향후 교육대상자의 청렴의식 개선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민관거버넌스·지방의회·지자체·청렴도 미흡부처 등과 지속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I-1-①.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	우수
I-1-②. 부패 예방을 위해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다소우수
I-1-③.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미흡
I-1-④.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	우수
I-2-①. 부패사건 적극 대응 및 불공정 관행 개선	다소미흡
I-2-②.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보상	보통
I-2-③.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개선	매우미흡
I-2-④. 공공기관의 불공정 및 채용비리 관행 개선	다소미흡
Ⅱ-1-①. 국민고충 적극 해소 및 사회적 갈등의 주도적 해결	다소우수
Ⅱ-1-②.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적 민원상담·처리	보통
Ⅱ-1-③.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보통
Ⅱ-2-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흡
Ⅱ-2-②.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매우우수
Ⅱ-2-③.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보통